



## 치대도 정원 감축안(案) 논의 의발특위산하 의료인력전문위 안전채택

치대 정원 감축안에 대한 안건이 정식으로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 산하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의료인력전문위 제9차 회의가 지난 8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려 8월 중 실무소위를 거쳐 9월 중 3차 의발특위 특별위원회에 상정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6일 치대 교수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무상 의발특위 의료인력 실무작업 팀장과 논의를 거쳐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발특위 전문위원회에 상정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 인력 방안의 문건에 치협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권익단체의 인상을 시민단체에게 줄 수 있어 제외하고, 구강보건연구소 연구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도 논의했다.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친 치대 감축안건은 오는 27일에 열린 소위원회에서 보건경제학 전공자, 치과대학 교수 등을 참여시켜 치과의사 인력수급 보고서를 보완하기로 했으며, 이를 9월 둘째주 중에 의료인력 전문위에 상정기로 했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의대 감축안이 특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치대 감축안도 정식 절차를 밟아 가고 있어 곧 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번 정원감축안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치대 신입생을 10% 줄여도 2012년에는 3천명이 초과하기 때문에 과잉인 것으로 나타나 정원감축에 대해 조정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치대정원도 10% 감축 마땅"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정재규 협회장과 오찬서 밝혀

박종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대 입학정원만 10% 감축할 것이 아니라 치대도 10%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난 8월 13일 밝혔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날 이영수 치협 치무위원회 위원과 함께 박 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갖고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에서 정 협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치과의사 인력이 올해부터 2000명 과잉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과의사 과잉 배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치대 입학정원도 의대와 마찬가지로 10% 감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치의 과잉현상에 대해 공감하고 있

다"며 치대도 "10% 감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치과 보조인력 문제와 관련 정 협회장은 "개원가에 치위생사와 조무사가 태부족해 치과경영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히고 "치위생사수는 대폭 늘어나야 하며, 치협이 구강진료조무사 제도를 추진하는 만큼 꼭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정 협회장은 특히 "WTO 시장개방과 관련 WTO 협상은 외교 통상부가 주도하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치협 의견이 무시되는 사태가 발생 되서는 곤란하다"고 피력하고 박 위원장이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정 협회장의 말에 모두 공감한다"며 "앞으로 보건약계 단체장들의 리더인 정 협회장과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 강력 촉구 치협, 복지부에 개정안 제출

치협은 최근 의료법시행규칙 중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표시금지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했다.

치협은 올해 3월 30일자로 개정·공포된 의료법 제55조 제2항에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합리적인 국민의료비 절감 등 제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 한해서만 전문과목 표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현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자칫 국민들에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혼동돼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 의료법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1차 의료기관에서는 전문과목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도 표시를 금지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안으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과목 표시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 제안했다.

개정 사유로는 △국민들의 전문의 선호경향으로 인해 모든 치과원들이 진료과목을 표시할 것으로 판단 △치과경영 등의 이유로 비보험 분야인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의 특정진료과목만 표시 우려 △비보험 분야 주력으로 불필요한 고가 의료기기 구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 초래 △특정 인기과목 지원자 편중으로 인한 균형있는 학문 발전 저해 등을 들었다.

치협은 또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있어 치과병원을 수련병원에 한해서 표시토록 할 것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의료광고시 치과의원은 제외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